

## 시선

## 사설

## 프라임사업, 계획서 제출 후 구성원 소통이 더 중요하다

우리학교가 프라임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재정'의 문제일 테다. 재정 없는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 프라임사업 대형 사업에 지원하는 우리학교는 선정될 경우 최대 300억 원이라는 지원금을 얻어내게 된다. 학교의 주장대로 프라임사업에의 참여가 우리학교의 장기적 발전계획에 부합한다면, 이 재원은 아주 좋은 효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재정' 그 자체가 우리학교의 프라임사업 참여의 제1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제1 목적은 위에서도 적시한 바, '프라임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학교의 장기적 발전계획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프라임사업의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유력 대학들은 이 사업 대신 CORE사업을 선택하며 사실상 프라임사업에 불참을 선언했다. 여기에는 각 대학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강력한 수준의 학문단위 재조정'과 '인위적 구조조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프라임사업 참여과정에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 유력한 관측이다. 환언하면 이 유력대학들은 프라임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스스로의 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학교가 프라임사업에의 참여를 선언한다면, 우리는 사업참여와 함께 따라오게 될 이 '강력한 수준의 학문단위 재조정'과 '인위적 구조조정' 등이 우리학교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성과 일치한다는 것을 앞으로의 실천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경쟁 대학 간 사업계획서 유출을 극도로 방지하는 분위기인 프라임사업 준비과정의 특성상, 지금까지 대학본부 측은 우리학교 프라임사업 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구성원에게 거의 비공개로 일관해왔다.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코앞으로 닥친 학문단위 재조정과 인위적 구조조정이 과연 우리학교의 정사진에 부합하는가를 따져볼 기회가 없었던 것은 물론, 당장 '내'가 속한 조직이 학제 개편의 대상이 되는지 조차 가늠할 수 없었던 형국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원의 불안은 프라임사업에 대한 건강한 논의가 아닌 감정싸움의 양상으로 번져나가는 추세다. 경쟁 대학인 중앙대학교가 양 캠퍼스 전체 구성원을 상대로 각 한 번씩 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 참여를 위한 소통작업을 해왔음을 감안하면, 그간 우리학교의 전체를 위한 소통 노력은 아쉽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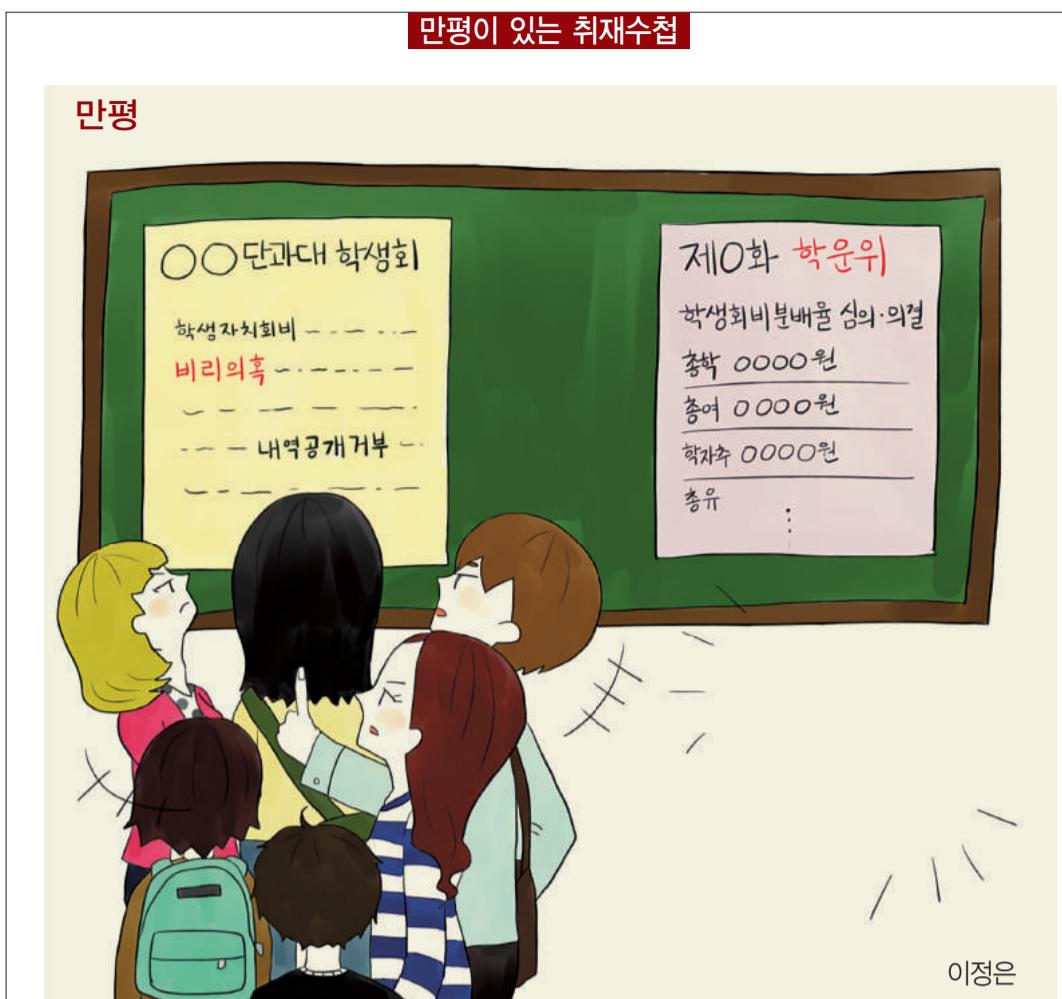
사업 선정 이후, 앞으로의 진행을 통해 우리가 감행한 학문단위 재조정과 인위적 구조조정이 우리학교의 청사진과 일치함을 증명해가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오는 31일, 교육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직후부터 대학 측이 전 구성원을 상대로 학과 개편 및 인원 이동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양한 소통체계를 마련해 현재 양 캠퍼스 구성원이 갖고 있는 술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구성원을 설득하여 단일한 힘으로 응집시키는 것이 당장 대학본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 “지난해 기준 자치회비 분배한다면 학생회 운영 어려워”

미디어 여론동향 2016. 03. 14. ~ 03. 25

여론동향팀 khunews@knu.ac.kr

지난 21일 오비스홀 411호에서 총학생회(총학)가 주관한 제1차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가 열렸다.(서울 캠퍼스 제1차 확운위, 단과대학 학생회 “자치회비 분배액 받아들이기 어려워”/대학주보 온라인, 2016.3.23) 이번 확운위에서 총학 측은 방중활동 보고·자치회비 사용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한 뒤 곧바로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안건을 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학 사업계획서’와 ‘학기 자치회비 분배율 심의’ 등이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다른 ‘사업계획서’는 ‘공약이행’과 ‘신뢰 회복’이 주안점이었다. 총학 정주희(사학 2012) 회장은 “학생자치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볼 때마다 학생사회



이주의 주제 - 학생자치회비를 통해 바라본 ‘학생자치 주인의식’

## 꾸준한 관심이 ‘신뢰 받는 학생자치’ 만든다



우리는 월드컵에 열광한다. 세계 무대에서 그라운드를 누비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 대회가 열리는 기간이면 사람들은 광장을 붉은 옷으로 물들이며 축구의 매력에 한껏 빠져든다. 하지만 축구에 관한 관심은 거기까지일 뿐, 정작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고 있는 자국리그인 ‘K-리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학생자치회비를 취재하면서 느낀 점 또한 이와 같다. 얼마 전 체육대학의 오리엔테이션 비용 논란으로 촉발된 ‘자치회비 운용’에 대한 의혹처럼 큰 사건이 터질 때면, 학생자치에 대한 수많은 관심과 함께 다양한 비판이 쏟아진다. 하지만 문제 가 일단락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학생자치에 관한 관심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실제로 우리 신문의 온라인 기사 조회 수와 페이스북 페이지의 도달 범위를 분석한 결과, 문제와 의혹이 터진 내용을 다룬 기사에 대해서는 평상시 조회 수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의 관심이 쏟아지지만 정작 학생자치 활동 전반을 논의하고 학생자치회비 분배율을 심의·의결하는 여러 기구에 관한 기사의 관심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같은 기구들 말이다. 학생자

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작 사건 이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이다.

우리 학교의 자치회비 납부율 역시 5년간 약 10% 가량 낮아졌다. 평상시 학생자치회에 대한 낮은 관심도는 이미 자치회비 납부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던 셈이다. 작년 5월 총학생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학생들의 ‘학생자치’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여준다. 자치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학생회에서 자치회비를 의미있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가 71.8%로 가장 많았다. 결국 낮은 신뢰와 관심은 학생자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다시 일반 학생에게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다시 축구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혹자는 K-리그가 인기 없는 이유로 “낮은 수준의 경기력과 떨어지는 리그 수준”을 꼽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축구 강호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이유는 그 밑바탕에 K-리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생자치도 마찬가지다. 총학생회 회칙 1장 5조에는 ‘우리 학교의 모든 재학생이 곧 총학생회의 회원’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 학생회는 학생회 임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만 해당 학우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우리는 상응하는 문제인식과 함께 주인 의식을 가져야한다. 즉, 학생회가 진정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평소 학생자치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구성원들의 활발한 참여와 건전한 논의로 학생자치가 더욱 건강해지길 바란다.

에서 총학의 역할을 고민했다”며 “앞으로 더욱 학생에게 귀 기울이며 활동해 신뢰받을 수 있는 총학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학기 자치회비 분배율에 관한 심의’에서, 총학이 제시한 자치회비 분배표는 학생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단과대학 학생대표 측은 분배액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음악대학 김문재(성악 2010) 회장은 “음악대학의 실습비 지원이 줄어들어 힘든 상황인데, 총학 측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난해 기준으로 자치회비를 분배한다면 학생회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자치회비에 관련한 안건이 부결돼 제2차 확운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복수전 공중 전공과목 수강신청에서 노골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는 글이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경희숲\_12897, 2016.3.15) 정규 수강신청보다 조금 늦은 대전공 수강신청에도 나름 학점을 채워 수강신청 할 수 있었음에 안도하던 글쓴이는 오리엔테이션까지 다녀온 후에 과 사무실로부터 ‘전공과목을 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무슨 일이나고 물어보니 과사무실에서는 해당 학과 전공생들이 참여좌석이 없어 전공필수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으니 타과학생은 모두 강의를 취소하라고 했다’며 하소연했다. 이런 사연에 대해 학생들은 ‘좋아요’, ‘화나요’, ‘최고예요’ 등 313개의 이용자 반응을 보였고, ‘내 등록금 내고 다니는 학교에서까지 우리는 갑질을 당한다’, ‘후마니타스 가르치면서 겉으로만 인문중심 인간중심’ 등과 같은 28개의 댓글을 통해 학교 측을 비판했다.

생리공결제에 대한 글도 학생들의 주목을 모았다.(#경희숲\_13013, 2016.3.21)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조차 못 갈 만큼 심하게 통증을 앓는다는 글쓴이는, ‘교수님께서 아픈지 안아픈지 어떻게 아나며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 하소연했다. 공결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자신을 보며 일부 남학생들이 ‘극혐’, ‘김치녀’ 운운하는 것을 듣고 ‘이게 욕먹을 일인지도 사실 모르겠다’며 마음 아파했다. ‘좋아요’, ‘화나요’, ‘슬퍼요’ 등 총 136개의 이용자 반응을 얻은 이 글에서 학생들은 22개의 댓글을 달며 의견을 나눴다. 대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철저하게 준비된

## ‘이원화 기준’이 필요하다

## 세시봉

이시은 (편집장)



프라임 사업이 대학가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지도 4개월가량이 흐르고 있다. ‘이원화 캠퍼스’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학교는 온라인에서 연일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관련한 수많은 댓글의 중심내용은 캠퍼스 간 갈등이 대부분이다. 프라임 사업이 사실상의 ‘이공계열 학종 사업’인 만큼, 이공계열 특성화 캠퍼스의 입지를 굳히려는 국제캠퍼스(국제캠)와 정원 손실을 막고 캠퍼스 내에 이공계열 학과를 끌어오려는 서울캠퍼스(서울캠)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캠퍼스 특성화’ 문제가 한두 해 제기된 것이 아닌 만큼, 캠퍼스 간 온도차는 크기만 하다. 때문에 항상 종래에 가서는 ‘중·장기적 해결’, ‘추후 논의’와 같은 결론이 나오고 만다.

문제는 처음부터 존재해 왔다. 80년대 공학계열 국제캠 이전 직후 어쩔 수 없이 중복으로 설립된 국제캠 자연과학계열 전공들, 소속 단과대학이 이전하는 가운데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학부로 독립한 무용부 등. 우리 학교의 이원화 역사는 훈돈 그 자체였다.

## 기준 없는 이원화, 대내외적 혼란 초래

## 더 이상 ‘추후 논의’로 미룰 수 없어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공계열 선호현상’과 겹쳐 극을 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프라임사업의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정원화대 가안에 더해, 아예 대학본부는 프라임사업 소통회의장에서 이학계열인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공학계열’로 분류해 발표표를 진행했다. 이과대학 주도의 ‘신설학과’ 역시 그러한 현상의 예시다.

이러한 기준 없는 이원화는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초래한다. 이름만 바꿔놓은 사실상의 ‘중복계열’들이 운영되며, 명분뿐이었던 ‘순수·응용’ 이원화 기준은 무너졌고, 게다가 캠퍼스 명칭까지 타 대학의 본·분교 명칭 방식과 같아 오해하기 쉽다. 재학생조차 양 캠퍼스 운영 방식이 이해하지 않는데, 외부 입시기관이나 일반 기업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은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학습권 보장’이나 ‘학문 간 융합’을 방해삼아 기준 없는 이원화를 운영하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행위다. 이원화 캠퍼스에서의 ‘학습권 보장’ 형태가 이미 존재하는 ‘중복 계열의 지속’이라면, 이는 반드시 반대쪽과의 부딪힘을 전제하는 것이다. ‘학문 간 융합’ 역시 기준 없이 분류된 현재 상태에서 각 캠퍼스가 ‘있는 재료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끼워 맞추기식’ 처사다.

‘이원화’의 본래 의미로 돌아가자. 진작 해결했어야 할 사항을 미루고 있는 와중에도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치밀하게 연구된 이원화의 기준과 철저한 행정개편으로 향후 10년, 20년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우리학교가 외치는 ‘미래 문명’에 있어 가장 첫 번째 낙오자가 될 것이다.

## 알림

## 대학주보에

##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nu.ac.kr/khunews/inform\\_us\\_list.asp](http://www.mediakn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해경 | 편집장 이시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자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 | 이메일 khunews@kn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덕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